

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

□ 금융위원회는 대부계약, 연체채무 추심, 채무상환 등 대출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「소비자신용법」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'19.10월 이후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「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」를 통해 법안 주요내용\*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\* [참조] “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” (‘19.10.8. 보도자료)  
“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상세자료 (포용금융 분야)” (‘20.3.3. 보도자료)

○ 다만, 동 기사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기사내용	사실관계
①연락제한요청권	추심금지 시간대 3시간 연장	사실과 다름 → 구체적인 방안 검토중
②채무조정요청권	2번까지 채무감면 요청 가능	
③채무조정교섭업자 수수료 상한	최대 150만원	
④매입추심업자 레버리지비율	10배→6배로 축소	
⑤매입·수탁추심업자간 겸영	겸영을 허용해 대형화 유도	

□ 금년 3분기중 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유관부처 협의 및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### < 소비자신용법 기본 추진방향 >

